

尹 체포 후 석방... 검찰, 항고 포기

법원,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윤 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지난 7일 받아들였다. 다음 날인 8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청구 2주 후인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공

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하고, 이후 양측에 열흘 간의 추가 의견서 제출 기간도 줬다.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져 현재 불법 구금상태라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돼 1차 구속기한은 1월25일 자정까지였으나, 검찰이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

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와 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때부터 10일 이내 구속 피의자를 검찰에

인치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어겼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으로 구속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로 송치될 때 ‘인치 절차’를 거치면 따로 영장을 청구할 필요 없이 신병 확보 상태가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 미비로 공수처가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면 즉각 석방하거나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한편, 대검은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간부 회의를 열고 항고를 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검은 입장을 내고 “(심우정) 검찰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또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던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현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특수본은 8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송부했다.

이에 지난 1월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됐다. /김재훈 기자

검찰,尹 구속 취소 항고 포기... 이유는?

‘위헌 결정’ 등 고려

특수본 반발에도 포기... ‘위헌’ 사례 참고

구속 산정 논란... 본안 재판에서 집중 방침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이틀간 논의 끝에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이 수사 주체인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재현 서울고검장)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구금 논란을 피하고 본안 재판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대검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간부 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만큼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는 2012년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보다 우

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란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검은 입장을 내고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석방지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 산정 논란에 대해선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관례 및 실무례에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野, 윤 석방에 “검찰, 내란수괴 줄게 자처”

헌법재판소 항에서는 신속한 파면 결정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내란 수괴의 줄게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도 거듭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어떤 말로든 변명할 수 없는 굴욕이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수괴의 줄게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어떤 말로든 변명할 수 없는 굴욕이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며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에 빠트린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은 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으로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김보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 오후 석방되었다”며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당은 내란 동조 세력인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 번호 0010만 됐을 뿐 내란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천개입 등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며 “내란수괴의 구치소 밖 나들이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위태로워진다”며 “다시 내란의 밤이 오면 탄핵의 불이 떨어진다. 흑독하고 잔인한 독재의 겨울이 다시 올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1

장연국 도의원, 파워리더

우수의정대상 수상받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2025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도민을 위한 장 의원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한 결과다.

장 의원은 12대 도의회에 초선으로 입성 후 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거쳐, 현재 후반기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행복한 학교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펼쳤으며, 현재 몸 담고 있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상의 영광을 안은 장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한길, 역사 교과서 다시 읽어보라”

더민주전북혁신회의의 “3·1 만세 삼창 극우 집회에 비유하나?”

더민주전북혁신회의(삼일대표 김용만)는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전한길 국가감사를 향해 응원편지 낭독이 아닌 역사교과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전북혁신회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 거짓과 근거 없는 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북혁신회의는 “전한길 감사는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옹호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 6일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서울 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응원 편지를 낭독했다. 또한 3·1절 광화문과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가 울렸고 그 외침을 헌법재판관 역시 모두 지켜봤을 것이라며 조만간 있게 될 헌재 심판 역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발언

했다.”며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한국사 강사가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과 세계에 울려 퍼졌던 한국의 독립의사가 처절히 담긴 ‘만세 삼창’을 어떻게 극우 집회에 비유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한, 전북혁신회의는 “전씨는 대통령을 향해 직무 복귀하면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더욱 희망을 가지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1,462만여명의 청년 세대가 불안을 떨치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도전하며 살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북혁신회의는 “전한길 감사는 근거 없는 주장들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역사 교과서를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공공·민간이 함께 만드는 ‘전북 아동행복 정책’

도, 첫 간담회 열고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동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행복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도는 지난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14개 시군, 전북교육청, 아동복지사업 위탁기관, 민간법인 등 10개 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아동행복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복지사업이 기관별로 분산되면서 발생하는 정보 단절, 사업 간 연계 부족, 중복 지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아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참석한 기관들은 △체계적인 보호(지원) 대상 아동 지원방안 논의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14개 시군, 전북교육청, 아동복지사업 위탁기관, 민간법인 등 10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아동행복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공공 아동복지사업 안내 △민간 아동복지사업 소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각 기관별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며, 중복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논의했다.

도는 앞으로 ‘아동행복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정책 발굴 등 아동복지 체계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지방의회혁신발전대상 수상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이 지난 6일, 2025 전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혁신발전·지역시민발전 참여 발전대상’을 수상했다.

김영태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남원시의회를 이끌며 적극적인 현장 활동 및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열린 의회 정립에 앞장서고,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민들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익산의 봄’

민주 이춘석 의원, 2025 의정보고회·당원결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7일 익산시립 모현도서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 및 당원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장, 익산갑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위원을 비롯해 당원 및 익산시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익산의 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그간의 경과를 공유하고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한편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석 의원은 영상과 발표를 통해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을 시민들께 설명했다. 이어 전북 소의를 철폐하고 익산 발전을 위해 추



진해는 의정활동의 성과를 보고했다. 특히 주요성과로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10억원 확보, 홀로그램기술 사업과 실증지원사업 추진 30억원 확보 등을 강조했다.

한편, 행사 말미에는 ‘내란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만호 기자